

# 국힘“사법부·일선검사·친여단체도 검수완박 졸속입법 반대”

### “민생범죄 어떻게 수사할지 설명하라” “文대통령과 차의장 용단이 필요한때”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삼권분립을 위해 의견표명을 삼가던 사법부, 일선 검사들, 검찰개혁을 외쳐온 민변·참여연대 등 ‘친여 시민단체’도 민주당의 졸속입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여론전 압박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제발 폭주를 멈추라는 경고 신호에도 민주당은 멈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헛구호 대신,

검수완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먼저 설명하라”며 “검찰 수사권을 왜 박탈하려 하며, 박탈 이후에는 민생 범죄를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저지 촉구도 이어졌다.

허 수석대변인은 “혼란과 파행을 국정 책임자인 문 대통령과 박 의장만이 막을 수 있다. 이들의 용단이 필요한 때”라며 “문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하며 퇴임 후 이웃에게 한가하게 이사 떡을 돌릴 때가 아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갈등과 혼란만을 초

래하며 퇴임할 것인가”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9일 철야로 열린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며 ▲수사 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억울한 피해자·피의자를 양산하며 ▲범죄자에게는 면죄부, 국민에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임에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강행처리 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성을 잃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대법원도 대검도 시민단체도 학계도 등을 돌렸고, 마침내 범죄 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평검사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는 평검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이슬기자

## 유석열 취임식, 2만명 시민 신청

관계자 “예상보다는 작게 신청...3만명 안돼”



오는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약 2만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측은

이번 주 내 취임식에 참석할 일반 시민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취임위에 따르면 약 2만명의 일반 시민이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신청했다. 앞서 취임위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취임식 참여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있다.

한 취임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시민들이) 예상보다 작게 신청했고 3만명이 안 된다”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다.

취임위 측은 “(이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최종선정은 이번 주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초청장을 발송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시민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게 될 일반시민·총인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취임위는 오는 22일 취임식 행사와 관련 진행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주선 취임위원장은 3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최대 5만명 수용이 가능하고 민의의 전달이자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전통과 관례의 장소로 인식돼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슬비기자

## 안철수 “마치 코로나 없는 것처럼 방역해제...현명하지 못해”

“방역조치 한꺼번에 완화해 긴장감 약화 우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0일 부친상으로 인해 인수위 업무를 돌보지 못한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실외 마스크 프리선언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 위원장이 상중에도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내 정부에 ‘속도조절’도 주문한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용현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낸 ‘코로나 대응 메시지’에서 “코로나 특위를 포함해 많은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완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짐에 따라 자칫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여전히 하루 10만명의 확진자와 하루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가을 겨울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고, 오미크론 이후 신종 변이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일상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고 비유하면서 “실외 마스크 프리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잘 지켜주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에서 선불리 방역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말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비판하곤, “인수위의 코로나 특위는 이행기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격리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어떻게 보호할지, 지역에서 혼자 사시는 고위험군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어떻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보장할 수 있을지, 재유행이나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 의료체제를 어떻게 재동원할지 등 많은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나아가야 할 일상회복은 코로나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에선 일상회복과 동시에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코로나대책을 철저히 마련해나간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